

코리아포럼 요약

제 목 :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

- ▶ 일시 : 2006년 7월 5일 (금) 15:00-17:30
- ▶ 장소 : 토즈
- ▶ 참석 : 사회자 (서동만,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교양과 교수)
발표자 (김연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경대 정치외교학과교수)
토론자 (이희옥,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참석자 (코리아연구원 연구진, 자문위원, 회원, 초청 인사)

※코리아포럼은 연구자-정책결정자-관련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장입니다.

문의 : knsi@knsi.org
www.knsi.org

사단법인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서동만

제 3회 코리아포럼을 시작하겠다. 오늘(5일) 새벽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예상외로 동시다발적이었고 시기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췄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럼 발제를 듣겠다.

김연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관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선택을 중시하는 입장의 경우 북한이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기 보다는 6자회담과 북핵문제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내부 논리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군부의 불만 등이 작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다.

미사일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상카드로서의 측면이 있을 것이고, 1998년의 경험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당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부의 논란을 가중시켰고, 윌리엄 페리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과 ‘페리 프로세스’로 귀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 이란이 강경대응 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선택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결국 미사일 발사는 앞서 말한 군부 불만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의 작용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내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킬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사일 발사 전이나 후의 부시 행정부나 그 주변 전문가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도덕적인 접근’으로서의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포동 2호 발사 실패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것 같다. 부시 행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적대적 무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적 제재에 착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최근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상원에서는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어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리처드 루가 위원장이나 리사 머코스키 동아태소위원장,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간사 등은 지속적으로 직접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움직임들에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98년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게 여소야대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고자 하는 주도권이 필요했다면,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것 같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그 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설령 대북정책조정관이 신설된다고 해도 금방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 변수가 되기도 어렵다.

최근 미국의 대 이란 정책이 변화한 것도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 이란을 공격했을 경우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란은 이라크와 달라 군사 공격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변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 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여전히 직접 협상보다는 다자간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직접협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등 그간 준비한 제재 방안을 빠른 속도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시 행정부가 생각하는 다자간 제재는 동북아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98년처럼 의장성명 이상은 나오기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북관계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원하지 않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고, 서로 마주보고 차를 모는 이른바 ‘치킨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거나, 일본-중국-한국에 제재의 강도를 높이라는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전망이 있겠지만 북한 역시 압력에 굴복하기보다 긴장을 더 높여갈 것이다. 당분간은 6자회담 파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6자회담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도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자. 남북관계는 이미 ‘성장통’을 앓고 있었다. 그 성장통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됐지만 정치군사적인 신뢰구축에서는 더딘 ‘불균형적 상황’이었다. 이 불균형 구조로 인해 최근 남북관계에 진통이 있었고, 미사일 발사로 그 불균형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제적인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이런 상황전개라면 남북이 지속해온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개성공단만 해도 미국이 사용할 카드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1단계 5만평 분량이 끝나고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시범공단이 들어설 때에도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미국 상무성에 평

장히 어렵게 협조를 받아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미국 상무성이 전략물자반출제도를 굉장히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 진행 속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비료는 합의가 되어 어쩔 수 없겠지만 합의되지 않은 쌀 50만 톤은 당분간 주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음 주 부산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열린다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남북 관계에서 오는 실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북 지원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지 않다. 열차 시험운행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험관련 남북 협의들은 계속 진행되었다. 북한의 대남 부서나 내각의 경제 관련 부처들은 남북경협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미련이 있다. 그래서 북한 역시 예전처럼 긴장국면에서도 모든 걸 중단시키지 않고, 최소 경제적 실익이 되는 부분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확인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협력을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정세 악화를 대비한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간 남북미 삼각관계를 선순환으로 이끌면서 위기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시켰던 경험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일간 독도문제나, 한미FTA 협상 진행 등으로 다소 소홀해진 중국과의 관계, 한·미간의 굵직한 현안 등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협상국면이 조성될 텐데 문제는 시간이다.

이해정

지난 해 APEC이후 힐 차관보는 3월 8일과 6월 29일 하원 아태소위에서 연달아 “당분간 북미 관계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등의 반복적인 발언을 했다. 발언의 이유는 북측의 핵과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 촉구와 이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이 입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적대적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이 정책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반적 관측에 동의한다.

현 상황에서 사실 적대적 무시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북정책이 실질적으로 없다.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가 커지려면 한미관계에서의 일종의 강력한 도전 같은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합의했고 한미FTA를 추진하는 등 그런 도전이 없다. 대북정책에서의 이견도 별로 없어 한국이 요구

를 할 수 있는 운신 폭도 없다. 또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한반도에 대한 역할을 일정하게 떠넘기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9.11테러가 중요한 변화 요인이었다.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때만 해도 주권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권의 근거가 되는 것들에 대해 미국이 전면 부정하고 있다. 조건부 주권 인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정권의 성격문제 등에서 미국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한다는 원칙 하에서만 주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이 미국에 용납될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해왔던 정책의 관성 안에서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여러 문제에서 관성적 사고를 벗어나야 하는 역사적 시점일 수 있다.

이회옥

북한은 미사일을 쏘을 경우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상했을 것이다.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조정과 균형 역할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중국학자들은 거꾸로 북한이 중국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말을 한다. 그 점에 대해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북중 관계개선은 과거에 그만큼 관계가 약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중국을 불신한다. 과거 3자회담부터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북한을 압박했다. 3자회담의 경우 중국의 압박으로 나왔는데 정작 회담 참여는 러시아를 통해서 했다. 후진타오는 집권 초기에 북핵문제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전통적 표현을 북핵 문제가 중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말로 변화를 주어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것을 외교부 당국자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때 북한측에 중국에 대한 섭섭함이 생겼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이런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후진타오의 최근 움직임이다. 후진타오는 2005년 방북 시기에 ‘북한의 개혁개방’, ‘아시아 사회주의 승리’ 및 ‘유럽 사회주의의 실패’ 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변화가 결과적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을 촉진했다. 그리고 그 시기 후진타오 정부가 친미적인 외교노선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국내 정책적 측면에서 계층간, 도농간,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경제-사회 정책을 살펴보면 사상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사회주의적 측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입지의 약화가 관측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 참여, 한미FTA 등에 따른 한국의 한미관계 재강화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내부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북측의 불신을 만회하고, 상호 영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최근 북중 관계의 국면이다.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강화를 예상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이 중국 측에 전달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미국과 달리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간의 중국의 정책 역시 무시정책의 일환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간 양자대화 보다는 대화 형식을 다자회담의 틀에 가둬두려는 측면이 있었다. 최근 비공식 6자회담 제의를 살펴봐도,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나가려는 부분에 집중한다. 중국은 그간의 회담들이 중국의 성과라고 강조해 왔는데 교착되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간 쌓아왔던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미간 양자대화 가능성은 약하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조정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미국사이에 이익 상관자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국면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하나는 과거 BDA(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면이 있다. BDA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과 남북 공동으로 보조를 맞춘다는 표현을 쓰고 북한에 여러 경로로 문제해결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는데, 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고 보자는 식의 반응을 해왔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중국의 양해를 구한 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사일문제에 관해서는 자주권이 있다는 공식적 입장이었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한 중미관계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의 정책을 변경하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복합적 문제가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이 문제를 다시 6자회담의 틀로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6자회담 무력화, 양자회담 실시라는 목적은 앞서 말했듯 중국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면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6자회담

틀로의 복귀를 통해 체면을 살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충적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북한을 비공개적이고 조심스럽게 압박하는 전통적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북한 부담론'이 부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주도적이고 가시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상황을 살펴가면서 결국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시 협상태이 블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때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보조가 관건이다.

김연철

이혜정 교수님이 말했듯이 9.19 합의 과정과 공동선언 직후, 종결 발언부터 교착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9.19 공동선언 종결 발언에서 힐 차관보는 위폐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얘기했다. 9.19 공동성명 미국 초안에서 말한 인권문제 등이 공동선언문에는 실제로 빠졌다. 공동선언문에는 다자 접근과 양자 접근의 문제를 분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양자 접근 측에 우려사항이 몰려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상황은 다자적 합의와 양자적 접근의 분리로 인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희옥 박사 말씀에서 어쩌면 중국 내에서 정경 분리, 정경 연계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중 경협을 보면 중국정부 차원의 전략적 협력이 있다. 또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인건비 경쟁력이나 중국산 소비재의 북한 내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북-중 경제관계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 할 때 중국의 민간기업들의 협력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현재 민간 협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논쟁도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박순성

9.19 합의는 6자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책을 6자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 냉전으로 가지 않고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대립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통해 접근하고 있고, 미국은 동시에 대북 압박책을 시행하고 있고, 반면 중국은 러시아의 60년대처럼 대북 포용의 길로 들어섰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악의적 무시 정책에 대응하면서도, 6자회담에서 나온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에 불리하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보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중국이 결코 대북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악의적 압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상황을 냉전적 체제와 유사하게 바꿔보면서 미국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북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지부진하게 계속된다면 북 의도와는 달리 한국이 들어갈 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다. 신 냉전이 수립되는 대전환기라면 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북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응하지 않고, 중국이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고 9.19선언을 지키려 한다면 미국도 대안이 없고, 북한도 이미 카드를 써버려서 오히려 한국이 들어갈 폭이 있지 않느냐는 희망이 있다.

서동만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애매한 상황인데, 북측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불을 지르면서 신 냉전구도로 몰아가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FTA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이 미사일 발사를 촉진시켰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제에서 언급되었듯이 당장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 정경 분리나 정경 연계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미 미사일 문제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에 앞서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철도연결을 위한 군사보장을 연계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은 사실상 변경됐다.

김연철

엄밀하게 보면 경협문제와 정치군사 문제는 밀접히 연결된 것이 사실이다. 선순환 과정에서의 접근과 달리 악순환 과정, 즉 긴장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 경제에서 쌀 50만 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7:1조치는 북한의 물가를 현실화한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요체다. 물가나 임금에 식량가격이 기준물가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올 여름 식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고, 악화 시에는 북한 경제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것이다. 쌀 5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종석 장관의 쌀·비료 발언은 시기상 미사일 발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고 필요성이 있어서 언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앞서 발언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본래 얘기했던 ‘인도주의 정신’에 맞기는 게 옳다. 너무 많은 걸 군사문제에 연결하면 남북관계,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것이 또 다른 압력이 되어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이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서동만

이번 동시다발 발사를 군사 실험적인 측면에서 설명했는데 단중장 미사일을 다 쏘았다고 가정할 때 전략적 의미가 복잡해진다. 일단 미사일은 미·일용이었는데,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번 동시다발 발사는 단거리의 의미까지 포함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물론 아직 명확한 사실이 나오지 않아 선불리 단정하기 힘들지만 미묘한 측면이 있다.

이혜정

북에서 합리적 계산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면, 발신자는 분명한데 수신자가 다 발이다. 북한 내부용이기도 하고 미국이나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정확한 대전제를 알 수는 없지만, 핵미사일 실험과 6자회담,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문제 등 동시다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설이나 미국의 선제 공격설은 현재 6자회담 틀에서 해결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라진 듯 보인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더 높다. 사실상 군사해법은 숨어있지만 더욱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악의적 무시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대 테러적인 측면의 이유를 들어 전략적으로 무력대응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비료나 쌀 지원 같은 경우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우리 나름의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일관적이지 못하고 위계질서가 분명하지 않은 정책은 문제점이 크다.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문제의 '해법' 역시 대통령의 리더쉽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도 수신자가 여럿으로 해석되는 부정확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성탈피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희옥

북한이 현재 중국에게 보내는 신호는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측 부담을 중국에 떠넘김(burden-cut)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라는 형태로 나온 것이므로, 북·미간 직접협상으로 풀자는 요구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미국의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다.

또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쌀과 미사일을 연계하

는 게 향후 남북관계 해결에서 과연 전략적 선택일지 의문이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역할을 정교하게 분담해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에 중국과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할 텐데, 중국이 빠진 상황에서 제재에 참여할 때 한국의 입지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서동만

미사일 문제로 돌아가 보자. 6자회담은 엄밀히 핵문제고, 미사일 운반 수단은 포함 안 된 것이다. 다만 묵시적 측면에서 볼 때 2002년도 평양선언에서 미사일 발사 보류안(모라토리엄)이 들어가 있는 문안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김연철

문제는 평양선언에 미사일 모라토리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납치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서동만

선언문을 해석할 때 미사일 문제가 9.19나 6자회담에 저촉 안 되는 걸로 해석하면 그만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새롭게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김연철

99년 모라토리엄의 전제조건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다. 6자 회담이 재개되면 다시 모라토리엄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대화 재개 이후 미사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마지막 미사일 협상을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를 북한이 제공 받을 수 있다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거리의 외화별이 수단이기 때문에 현금보상을 요구했지만, 포괄적 경제 협력을 약속한다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북의 마지막 입장이어서 그것이 유효하다면 양자 관계에 있어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동만

북측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 당시의 협상이 참고가 되어서 미국과의 교섭이 성립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남쪽 내부의 대북정책 관련 국민적 합의와 앞으로의 국면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발언해 달라.

이혜정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FTA를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역시 외교안보문제에서 어젠다를 설정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추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또한 비료나 쌀 문제 같은 경우 일관되지 않은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나 관료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분명한 메시지를 갖는다면 미국정책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할 몫이 상당히 크다.

김연철

국회나 정부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원칙적인 합의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의회나 정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희옥

남북관계기본법을 보면 시민단체 역할과 정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법안으로 통과시켜 대북정책조정관 같이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시키고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서동만

외교안보 현안, 대북정책은 결국 대통령의 아젠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간 우선순위에 있어 국내 이슈에 뒤쳐졌다. 예방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 정책 의제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이슈라는 게 부처에 따라, 정부 입장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정부 내에서 조정하여 통일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적 합의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긴 시간 발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참석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린다.

<끝>

2006/07/05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